

‘황금알’ 서 ‘골칫거리’ 된 전남 태양광발전

단가 인하 등 수익성 떨어지고 산림 훼손·침수 피해 등 민원도 급증세
강진·나주 등 사업 포기 잇따라...올들어 7개 시·군 허가 취소 422건

신재생에너지로 인기를 끌던 태양광발전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산림 경관과 자연을 파괴한다며 반발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리한 소송전이 이어지는가 하면, 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허가를 스스로 반납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폐업’ 절차를 밟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7개 시·군에서만 올 들어 태양광발전허가 422건 취소= 2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나주·여수·목포·신안·강진·영광·고흥 등 전남 7개 시·군에서만 올들어 취소된 태양광발전허가 건수가 422건에 달했다. 이들 7개 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많았던 상위 7개 지역이다.

강진의 경우 올들어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44곳의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했고 스스로 허가를 반납한 업체도 28곳이나 됐다.

나주에서도 121개 업체가 태양광발전허가를 스스로 내놓았고

고흥 71곳, 영광도 60곳의 업체들이 태양광발전허가를 반납했다.

발전사업 허가 반납 뿐 아닐 허가건수도 크게 줄어 들고 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1만 474건에 달했던 전남 지역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는 이듬해인 2019년 2567건으로 5배 가량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953건에 그치며 절반 가량 줄었다.

발전용량으로 비교할 경우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2018년 허가받은 발전용량은 3048.3㎿로, 2019년에 634.4㎿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 317.4㎿로 다시 떨어졌다. 자치단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1㎿미만의 허가를 얻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송·배전 전송 설비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발전 단가 인하 ▲설비 원자재값 증가 등으로 태양광발전

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자는 계통접속을 해야 생산한 전기를 한국 전력망을 통해 송·배전할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송배전 인프라가 설비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고도 송배전하지 못하고 설비를 놀리고 있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계통 접속까지만 평균 3~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 기간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전망도 어두워=발전사업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 단가도 하락세도 태양광 사업 포기

태양광발전 설비보급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REC 발급량이 많아져서 REC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결국 설비가 늘어나게되면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세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마을 경관과 산림 훼손, 침수 피해 등을 우려해 개발을 중단해달라는 민원도 급증했다.

전남도



실전같은 화재진화 소방전술훈련 평가

27일 오전 광주 동부소방서 차고에서 119대원들이 올해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동부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실시했다. <광주동부소방 제공>

경매 물건으로 나온 무안군 18평형대 아파트가 16억원대 가격에 낙찰됐다. 법원이 공시한 감정평가액(1억 64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가가 결정되면서 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경매전문기업인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목포지원은 지난 25일 무안군 삼향읍 근화배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결정된 낙찰가격은 16억4580만원으로, 최저 입찰가인 1억 6400만원의 10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타난 같은 아파트가 1억6000만원(17층)~2억(25층) 수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앗 실수?...입찰표에 ‘0’ 하나 더 적어 1억6천만원 아파트 16억원대에 낙찰

무안 18평형 감정가의 10배...보증금 1640만원 포기할 판

잔금을 내지 않고 매수를 포기할 수 있지만 대신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인 1640만원을 포기해야 한다. 낙찰자가 입찰표에 ‘0’자를 하나 더 적은 실수라며 법원에 ‘매각 불허가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도 많지 않고 매각허가 결정(25일) 전에 해야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일단, 수기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 과정에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러 높은 금액을 적어 경매를 방

해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경매 물건 채권자들 간 금액을 높게 써내 낙찰 받은 뒤 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지도록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최대 5배 이내의 금액을 쓰지, 10배까지 적어내는 경우는 없다”면서 “해당 물건 낙찰자는 채권자도 아니고 입찰 금액도 정확히 10배 많은 것으로 보여 실수로 ‘0’을 하나 더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낙찰자는 서울지역 법인으로 최고가 낙찰가에 대한 설명을 들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투기 목적 농지 구입하고 영농계획서 허위로 제출 목포경찰, 18명 검찰 송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주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경찰청은 27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A(60)씨 등 18명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18명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도 77호선(해남 화원~신안 압해) 일대 농지 37필지(4만 1411㎡)를 사들인 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도 77호선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교각 공사가 이뤄지는 등 개발이 진행됐고 일부 지역의 경우 3.3㎡당 3~10만원 수준이던 땅값이 수십만원까지 올랐다.

A씨 등은 그러나 미리 정보를 취득해 사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사전에 입수한 도로개설 정보를 활용, 주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화순 전 국회의원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제 4·6·7대 화순군의회원을 지낸 B의원은 지난 2015년 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화순읍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취득, 주변 건물을 사들인 혐의다. B의원은 지난 2017년 이 건물을 팔아치워 3억 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청앞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노총 2명 소환 조사키로

광주서부경찰청은 27일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신고한 집회 참여인원(49명)보다 많은 13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경찰은 또 50명 이상 집회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데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확보한 자료를 재검토중으로 출석 요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방역당국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대로 형사입건 대상자 및 과태료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